

풍력발전량 풍부한 전남, 에너지산업 중심 도약 '바람' 탔다

해상풍력법, 지역 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 가능해져 전력망확충법, 호남권포화로 제약 받은 인·허가 절차 속도

전남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통과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177.9TWh)의 37%를 책임질 정도로 풍부한 재생에너지발전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간 호남권 계통포화문제로 제약을 받아온 점,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오랜 기간이 걸린 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상임위 통과와 관련,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법안 통과에 애초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익 의원과 권향엽·정진욱 국회의원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 100GW' 시대 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원전·재생에너지, 전력산업 등과 맞물린 국내 에너지 업계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도는 전국 1위의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첨단 글로벌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의 전남 유치를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관련 법 통과로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인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법적 지원 기반이 확대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안의 경우 해상풍력 인허

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과 발전사업 실시계획 협의 권한 등이 포함돼 지역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전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신안(16개소), 영광(16개소), 여수(11개소) 등 59개소에 18.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전력망 확충법안도 더디게 진행됐던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폭증한 전력 수요를 고려해 전력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실어나를 송배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때문에 전력망 확충법안에는 ▲전력계통 포화지역 우선 선정 ▲고속도로와 같이 정부가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 지원 ▲지역 내 생산 전력은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한국전력이 주도해온 전력망 확충 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비효율적인 소통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망 건설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전 등은 전남을 포함해 각 지역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표준 공사기간(9년)을 훌쩍 넘어서 최대 12년 6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면 신규 발전허가도 오는 2031년까지 중단될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돼 에너지 기본소득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준위방폐장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원전 내 방폐장 건설이 가능해진다. 노후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 부지 내 영구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설치까지 검토되면서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온다. 영광원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노후 원전 연장 운영에 고준위 방폐장까지 '에너지 3법' 통과에 영광 주민 불안감 고조

"건설저장시설 임시 설치라지만 영구 시설 될 수밖에 없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하면서 영광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후한 한빛원전 1·2호기의 10년 수명연장에 이어 부지 내 영구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방폐장) 설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가 영광 한빛원전 발전소 부지에서 건설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건설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차원으로, 한수원은 영광 한빛원전 내 9곳에 직경 75mm 이상의 구멍을 최대 180m의 깊이로 굴착해 지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수원은 건설저장시설 설치에는 설계·인허가·건설 등 총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인 2030년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원자력발전에서 쓰고 남은 사용후핵연료(핵연료 폐기물)를 보관한다. 이 폐기물은 방사선 세기가 강해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산자위에서 고준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의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면 영광 한빛원전 부지내 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준위법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빛원전에 건설될 건설저장시설 규모는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저장 용량으로 건설된다는 것이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부지조사 확보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원전 내부에 신축을 결정하면서 타지역에 중간·영구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한계다.

결국, 원전시설 내에 영구 시설이 설치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이 단지내 핵폐기물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이에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가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안전성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영광에서 평생 살았다는 이종영(65·묘량면)씨는 "이미 한차례 수명연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수명연장 단계에서 주민 신뢰를 많이 잃었고 당장 목적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고장도 잦아 온전히 한수원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차례 한빛원전 수명연장 단계를 밟았던 영광 주민들은 '임시 저장시설이란 미명 하에 영광에 영구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부지를 선정할 땐 전문학적 돈을 들여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을 지어놓고 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임시가 곧 영구시설이라는 것이다.

김용국 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에 공론화가 핵심인데, 임시저장시설 형태로는 공론화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화상태로 원전 폐기물을 한빛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것보다 방폐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전 집행위원장은 "당장 눈 앞에 닥친 문제만 보고 만들어진 법이다. 윤 정권 때 만들어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과연 민생법안이 맞는 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이재명 '월급쟁이는 봉인가'...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 문제에 이어 근로소득세법 개편까지 언급하는 등 중산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월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적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만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진행자가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월급방위대'를 꾸려 이 같은 방향의 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정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월급방위대'를 당내 특별위원회로 발족시키고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부양가족 중 자녀 기본공제 기준 상향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 개편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www.kwangshin.ac.kr